

수출전략회의 **대통령 권한대행** 모두발언(2.18.)

□ 지금부터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* (1차) '22.11월 (2차) '22.11월 (3차) '23.1월 (4차) '23.2월 (5차) '23.6월

□ 지난해 수출은 어려웠던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.

- 연간 8.1%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실적(6,837억불)을 달성하고, 글로벌 순위도 6위로 두 단계 상승했습니다.
- 경상수지도 역대 2위인 990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견고한 대외건전성을 뒷받침했습니다.

□ 그러나,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.

- 캐나다·멕시코와 철강·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3월에 예정되어 있고, 4월 상호관세와 자동차* 관세 부과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.

* 美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4.2% 부과할 계획 언급(2.14.)

- 대미 수출 영향이 파급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경쟁도 격화될 전망입니다.

□ 글로벌 통상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, “바람에 맞추어 돛을 바꾸듯” 해법을 계속 마련해 가야 합니다.

- 이에, 오늘부터 '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'를 재개하여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함께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,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.

□ 오늘은 우선 최근 높아진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합니다.

□ 무엇보다도,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.

- 이달 내 KOTRA와 지방중기청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관세·수출규제 등 해외정책 변화를 실시간 공유하고, 기업 애로 해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-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, 상반기에 수출바우처 예산*(2,400억원)의 90% 이상을 투입합니다.
* (산업부) 611억원, (중기부) 1,276억원, (농식품부) 360억원, (해수부) 116억원
-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.
 -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'관세 대응 수출바우처'를 도입하겠습니다.
 - 6월까지 무역보험·보증료를 50% 일괄 감면하는 한편,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합니다.
 -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.
-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세제지원*과 보조금**을 강화하겠습니다.
* 세액감면 요건 완화 : (現) 해외사업 축소 후 복귀 시 → (改) 축소 전 복귀 시에도 지원
** 지원비율 10%p 가산 : (現) 일반업종 21%, 우대업종 23%, 공급망업종 44%, 첨단업종 45%
- 아울러,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,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.

□ 위기를 기회로 삼고, 새로운 수출시장을 과감하게 개척하겠습니다.

- 우크라이나, 중동 등 향후 재건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수출 특례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-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(Global South)* 시장을 타게팅하여 현지 네트워킹, 무역금융,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.
* 아세안, 아프리카, 중남미, 중앙아 등 남반구·북반구 저위도의 개발도상국 통칭
-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,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·중견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
□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수출품목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.

- 디지털 서비스 수출지원을 위해 '테크서비스 전용 바우처'를 도입하고 우리 기업의 전자·IT 분야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도 확대합니다.
- 한류를 이끄는 화장품 시장에 유망기업이 진입하고 성장하도록 'K-뷰티론*'을 신설하고, 면세점 내 입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* 발주계약서(브랜드사 - 제조사)를 근거로 신제품 개발 브랜드사에 초기 생산자금 용자 공급

- 딸기·포도, 감·귤, 쌀가공식품 등 유망한 농수산물식품 수출을 위해 주요국에 공동물류센터(110개)와 콜드체인을 확대하고, 통관·검역 등 비관세장벽*에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.

* 통관·인증 전문기관 컨설팅 지원, '비관세장벽 플랫폼' 개설 등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